

# “새해에는 좀더 사뿐사뿐”...강화된 총간소음 기준 시행

### 주간·야간 총간소음 기준 4dB씩 강화 최고소음도·공기전달 소음 기준 유지 “분쟁 발생 시 피해 인정 가능성 커져”

기준보다 강화된 총간 소음 기준이 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총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했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

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dB, 야간 40dB이다. 이와 함께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를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양 부처는 영구영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강화된 총간소음 기준을 따를 경우 ‘총간

소음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총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또 총간소음 분별이 발생했을 때 총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총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해 총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총간소음 기준을 비

롯해 총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총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총간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새해 맞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제24회 국제팽귤수영대회 참가자들이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 들어 희망찬 2023년을 맞이하고 있다.

## 무등산 내려오던 50대 약사 심정지로 숨져

### “평소 뇌혈관질환 앓고 있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9시 35분께 전남 화순군 이서면 무등산국립공원 석불암 인근에서 하산하던 50대 약사 A씨가 심정지 증상을 보

이며 쓰러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지인과 점심을 먹고 하산하던 중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추운 날 등반 시 몸이 위축될 수 있으니 체온 유지를 위해 옷을 겹쳐 입어야 한다. 특히 지병이 있는 경우 만일에 대비해 비상약을 반드시 챙기고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슬비기자

## 전장연, 오늘부터 다시 출근길 선전전

### 오전 8시부터 삼각지역 탑승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재개한다. 새해에도 시위 종료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장애인 이동권이 비장애인 수준으로 보장될 때까지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일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관계자들은 2일 오전 8시계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선전전을 중단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3044억원) 중 일부(106억원)만 반영되면서 다시 출근길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21년 동안 외치고 기다렸음에도 시민권 중 하나인 이동권이 무시됐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지가 아닌 기본적인 시민권 중 하나인 장애인 이동권”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2021년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등의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 명이 휠체어를 타고 동시에 승하차를 반복하며 열차 운영을 쫓아는 수분에서 길게는 수십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출근길을 볼모로 잡힌 시민들의 불만을 높이고 있다. 어느덧 시위는 햇수로 3년째에 접어들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박 대표는 “(시위 종료)기한도 정해두지 않았다. 장애인 이동권 등 시민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하고 목소리 낼 것이다.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합의한 예산 증액을 거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자리에 나온다면, 면담이 이뤄진다면 지하철에서의 행동은 유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터라 시위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이 시위 재개를 예고하자,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지금까지 관용한 건 무엇인가. 21년 동안 지독하게 차별해온 사회에서 어떤 관용이 있었나. 이미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고, 형사상 기소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앞서 법원의 강제조정이 있었던 만큼 전장연 시위 방식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1월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영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사가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이 열차 운영을 5분 넘게 지연하지 않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장연 측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뉴스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